

김관영 지사, 국가예산 확보 '전력'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 만나 도 핵심사업 정부안 반영 협조 요청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경제 부흥을 뒷받침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를 방문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 지사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전북 유치'의 기세를 몰아 국가예산 확보로 이어가기 위해, 8일 서울로 직행해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을 만나 도 핵심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현재 기재부 예산심사는 건축재정 기조 속에 2차 심의가 마무리(8.4)되고 마지막 3차 심의를 앞둔 시점으로, 사실상 앞으로 남은 2주 정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막판 고삐를 바짝 쥔 채 김 지사가 직접 예산실장을 찾았다.

이날 김 지사는 김완섭 예산실장에게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회복, 전북의 새로운 변화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강력하며 도 핵심사업이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김완섭 예산실장에게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회복, 전북의 새로운 변화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강력하며 도 핵심사업이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먼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경제 부흥을 뒷받침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무총리 등 정부 수장들이 새만금 방문 시 피력했던 새만금 개발 의지를 언급하고, 기업 투자유인 및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임대용 지 추가 공급이 필요하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사업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도기기 기술개발 사업' 등의 정부안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예타 진행 중인 '군산항 제2주 설도 투기장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 용지 2·1단계 조성 사업의 국비 반영'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정과제 이행 필수 요소임을 설득하며, '국립 전북스포츠포츠종합훈련원 건립'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피력했다.

이올러 시군 특화사업인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완주군 '국립 나라꽃 무궁화원구소 건립', 익산시 '국립 석재산업진흥센터 설립' 등 시군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에도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정부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의 실현과 김관영 지사의 교육 협치 철학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별 핵심 산업분야의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어필하고 국비 반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되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가예산 확보 사전 회의를 통해 막판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고, 김 지사를 중심으로 정부예산안 반영에 전력을 다한다는 복안이다.

전북도는 기재부 심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적기 대응하고,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군-정차권과 공조하여 막판까지 전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각 실·국에서도 소액 심의사업 등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사무관 대상으로 끝까지 설득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식품소재·반가공 산업 육성

전북도, 사업 대상자 모집... 개소당 최대 15억원 지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내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 산업 사업 대상자를 19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은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농산물 수급조절을 목표로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85억원을 투자해 전국 12개소 내외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농협, 농업법인 등의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기업으로 개소당 7~15억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한도 내에서 식품소재·반가공품의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나 식품기업은 오는 19일까지

관련 서류(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8개 시·군 13개소가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총 112억 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올해는 정읍 칠보농협 공동제약(숙지황), 남원 썬앤들 잇힐리아(올리고당), 고창 웰빙비엔에프(도라지 분말) 등 3개소가 선정되어 30억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은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우리 도 식품 산업 발전과 도내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많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400억원→800억원 확대 발행

정읍시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정읍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4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지역업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지역 자금 외부 유출 방지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확대 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이화수 시장은 민생안정과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취임 첫날인 지난달 1일 정읍사랑 상품권 400억 확대 발행과 일상 화북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검토를 민선 8기

제1호로 결재한 바 있다.

연말까지 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유지하고,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방지해 더 많은 시민이 정읍사랑 상품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발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상품권 구매 한도도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혜택과 1인 최대 보유 한도 200만원이 기존대로 유지된다.

정읍사랑 상품권은 모바일형과 카드형 두 가지 형태로 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CHAK) 또는 농협과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46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북도·진안군, 수산자원 조성 붐어 치어 44만여 마리 방류

진안군은 8일 전라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수면 자연생태환경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붐어 치어 약 44만여 마리를 용담호 및 읍·면 공공용수면 6개소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붐어는 관내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으로 치어 크기는 전장 4cm 이상이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합격한 검증된 종자이다.

이날 방류에 진안군어업계연합회, 주민 등이 참여했으며, 방류수면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불법조업 감시 등을 통해 수산자원이 증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통가개, 다슬기 치어를 생육환경에 적합한 용담호 및 읍·면 공공용수면에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방류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진안=우태민 기자

전북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강화 나선다

전주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단독주택 밀집 지역 중심 합동점검 실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점검을 나선다.

도는 창문을 개방하는 하절기 특성상 주택가 등에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8월 중 이륜자동차 소음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음식 등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과속, 심야시간대 폭주 및 소음 증폭 등으로 수면방해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창문을 개방하는 특성으로 인해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의 수면 보호 등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에서는 시군, 전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8월 중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평소 민원이 많은 전주, 군산, 익산 등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배기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105dB(A)~115dB(C))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거, 추가 경음기 부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되며, 추가로 배기소음허용기준 초과와 소음기 훼손·제거, 경음기 추가 부착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사용정지 2일 처분 및 100만

원의 과태료부과가 병행된다.

전북도는 8월 합동점검과 함께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도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소음을 포함하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피해는 원인 제공자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음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운행한다면 이웃의 생활환경과 운행자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에서도 소음기준을 강화(105dB→95dB)하는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환경부와 함께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이 없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